

의안번호	2220628
의 퇴 인	정춘생의원
회 답 일	2026.8.27.
추 계 번호	26D40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선거일의 투표용지를 투표구의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고 전자적 본인확인 장비를 보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277억 5,200만원, 2032년 18억 4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646억 3,200만원(연평균 129억 2,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국선)	2029	2030 (대전·지선)	2031	2032 (국선)	합계	연평균
투표용지 인쇄율 상향 (안 제151조제1항)	1,675	—	8,398	—	1,804	11,877	2,375
전자적 본인확인 장비 보급(안 제157조제1항)	26,077	26,678	—	—	—	52,755	10,551
합계	27,752	26,678	8,398	—	1,804	64,632	12,926

주: 1. 투표용지 인쇄율 상향(안 제151조제1항)과 전자적 본인확인 장비 보급(안 제157조제1항)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개정안에서 투표용지를 투표구의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는 선거인 수의 100%로 가정하고, 전자적 본인확인 장비를 2028년부터 2030년 대통령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제작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51조제1항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선거일의 투표용지는 투표구의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의무규정
2	안 제157조제1항(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하는 선거인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교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51조제1항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
2	안 제157조제1항(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선거일의 투표용지를 투표구의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선거일 투표소에서 전자적 방식의 본인확인 장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현행 절차사무편람 또는 인쇄실적 대비 인쇄매수가 증가하고 본인확인 장비 제작으로 추가재정소요 발생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은 선거인 수 대비 인쇄율을 국회의원·대통령선거 60%, 지방선거 50%를 기준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있음
 -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2026.6.19.)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60%였으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인쇄비율을 50% 적용한 것으로 확인
- 본 추계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인쇄율을 절차사무편람의 하한선(국회의원·대통령선거 60%, 지방선거 50%)으로 보고, 개정안에 따른 인쇄율은 선거인 수의 100%를 적용
 - 사전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작성·교부되므로 개정안에 따른 인쇄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추계에 서 제외함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사전투표에서 사용 중인 본인확인 장비와 동일한 사양의 장비를 선거일 투표소에 보급하여 선거인이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도록 하고, 장비는 2년에 걸쳐 제작 완료하여 추계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
 - 본인확인 장비 수량은 사전투표에 사용 중인 기존의 본인확인 장비 (17,062대¹⁾)를 선거일 투표소에 재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여 추정
 - 본인확인 장비는 신분증스캐너·무인입력기·서명입력기 일체형 장비로, 단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운용장비(본인확인 장비) 제작 사업 (2022.11. 제안요청서)을 활용
-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 시 선거일의 투표용지 인쇄매수 증가, 전자적 본인확인 장비 보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며 보궐선거는 제외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²⁾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과 법률안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1)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운용장비(본인확인 장비) 제작 사업의 제안요청서에서 본인확인 장비 제작 수량으로 실제 사전투표 시 사용한 수량과 다를 수 있음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6.3)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3%	2.1%	2.3%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투표용지 인쇄율 상향(안 제151조제1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선거일의 투표용지 인쇄율이 현행 하한 기준(60% 또는 50%)에서 100%로 상향됨에 따라 증가하는 인쇄 비용
- 본 추계에서는 선거인 수, 선거인 1명당 투표용지 수량, 개정안에 따른 인쇄율 증분, 투표용지 인쇄단가를 곱하여 산출
 - (선거인 수) 공직선거가 있는 해인 2028년 45,528,657명, 2030년 45,819,545명, 2032년 46,012,371명
 - －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 2023년 12월 발표)에 근거하여 18세 이상 인구 수를 합한 값
 - (선거인 1명당 투표용지) 2028년 및 2032년 국회의원선거 각 2매, 2030년 대통령선거 1매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7매
 - (인쇄율 증분) 2028년 및 2032년 국회의원선거 40%p, 2030년 대통령선거 40%p, 전국동시지방선거 50%p
 -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은 선거인 수 대비 인쇄율을 국회의원·대통령선거 60%, 지방선거 50%³⁾를 기준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인쇄단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단가 42원⁴⁾은 202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참고하여 추정하였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표 2] 투표용지 인쇄단가 추정: 2028~2032년

	2028 (국선)	2029	2030 (대선·지선)	2031	2032 (국선)
투표용지 인쇄단가	46	47	47	48	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2026.6.19.) 참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는 지방선거에도 60%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제9회부터 50%로 인하함

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예산 145억 1,957만원을 예산 편성기준(선거인 수의 110%)에 따른 인쇄매수로 나누면 장당 42.6원으로 예산안 단가와 부합

- 추계결과, 선거일의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16억 7,500만원, 2032년 18억 4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118억 7,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투표용지 인쇄율 상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8~2032년

구분	2028 (국선)	2029	2030		2031	2032 (국선)	합계
			대선	지선			
선거인 수(a, 명)	45,528,657	-	45,819,545	-	-	46,012,371	-
선거인 1명당 투표용지(b, 매)	2	-	1	7	-	2	-
인쇄율 증분(c)	40%p	-	40%p	50%p	-	40%p	-
투표용지 인쇄단가(d, 원)	46	-	47		-	49	-
추가재정소요 (=a×b×c×d, 백만원)	1,675	-	861	7,537	-	1,804	11,87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전자적 본인확인 장비 보급(안 제157조제1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전자적 본인확인 장비를 보급하기 위하여 해당 장비를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본 추계에서는 2028년부터 2030년 대통령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제작해야 하는 본인확인 장비 수량에 1대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
- (수량) 2028년과 2029년에 각각 20,059대씩 총 40,118대로 추정
 - 투표소 수는 추계기간 중 예정된 공직선거의 종류별 직전 선거 투표소 수 중 최대인 제21대 대통령선거(2025년) 기준 14,295개소를 적용
 - 선거일 투표소 1개소 당 명부단말기 등 유사 장치가 4대씩 배치된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라 보급할 본인확인 장비도 투표소 1개소 당 4대로 가정하면 총 필요수량은 57,180대(=14,295개소×4대)이며, 사전투표용으로 기확보된 본인확인 장비 17,062대를 사전투표 종료 후 재배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40,118대를 2028년과 2029년에 균등 분할하여 제작
 - (1대당 단가) 2028년 130만원, 2029년 133만원으로 추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운용장비(본인확인 장비) 제작 사업예산에 따르면, 본인확인 장비 1대당 단가는 2022년 기준 113만원⁵⁾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운용장비(본인확인 장비) 제작' 제안요청서(2022.11.)에 따르면, 본인확인 장비 17,062대 제작에 총 사업예산 19,365백만원(부가세 포함)으로 1대당 가격은 113만원으로 추정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선거일 투표소에 본인확인 장비를 보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260억 7,700만원, 2029년 266억 7,8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527억 5,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4] 전자적 본인확인 장비 보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8~2032년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본인확인 장비 수량(A, 대)	20,059	20,059	-	-	-	40,118
1대당 단가(B, 만원)	130	133	-	-	-	-
추가재정소요(=A×B, 백만원)	26,077	26,678	-	-	-	52,75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선거일의 투표용지를 투표구의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고 전자적 본인확인 장비를 보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277억 5,200만원, 2032년 18억 4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646억 3,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국선)	2029	2030 (대전·지선)	2031	2032 (국선)	합계
투표용지 인쇄율 상향	1,675	-	8,398	-	1,804	11,877
전자적 본인확인 장비 보급	26,077	26,678	-	-	-	52,755
합계	27,752	26,678	8,398	-	1,804	64,6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상 현행 인쇄 하한기준과 최근 공직선거의 투표용지 인쇄 관련 예산 등을 참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운용장비(본인확인 장비) 제작 사업예산을 준용하고 사전투표용으로 기확보된 본인확인 장비의 재배치를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